

여야, 세월호法 ‘특검 추천권’ 한발짝도 양보 안해

7월국회 오늘 폐회 ‘빈손’으로 막 내릴듯

국정감사 일정 등 줄줄이 차질 불가피

세월호 특별법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인 18일까지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빈손’ 임시국회 ‘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간에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안산 단원고생의 대입특례입학에 관한 법안과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이 같은 야당의 강경 기류 속에 여야는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단원고 학생 특례입학법과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다시 협상을 벌여 일괄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는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에 대한 견해가 여전히 맞서고 있어 본회의의 소집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만약 19일까지도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례입학법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된다. 현재 단원고 3학년생이 대학 수시입학에서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선 7월 임시국회(19일까지)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올해 대학 수시모집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고 법안 처리 후 대통령의 공포 절차가 필요한 제정법인 만큼 1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1차 국정감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다. 여야는 올해부터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각각 열흘간 실

시하기로 하고, 8월26일~9월4일 1차 국감이 합의했다. 이 합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1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 개정안’과 관련한 규격안을 처리해야 한다.

뿐 아니라 청와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이나 유병안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처리도 발목이 잡혔다.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미뤄지게 됐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세월호특별법을 불모로 민생법안 처

리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세월호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분리처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이들 2개 법안 처리는 없다”고 못박은 뒤 “이번에 법안이 처리 안 돼도 오는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핵심인사는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 안 된 상태에서 단원고생 특례입학법을 먼저 처리해선 안 된다는 게 유족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어색한 여야 대표

18일 오전 서울 동국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어색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 손학규 강진에 등지?

정계은퇴 선언후

다산초당 인근서 2주째 침거중



정계은퇴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인 강진에 ‘등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 고문은 며칠 뒤 곧바로 강진으로 내려와 2주째 ‘침거’중이다.

특히 손 고문은 강진 다산초당 인근에 부부가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인 손학규’가 아닌 ‘서민 손학규’로서의 제2의 인생을 강진에서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 고문은 현재 외부인을 전혀 만나지 않고, 홀로 강진 백련사 토굴과 다산초당 인근 민박집을 오가며 그동안 정치활동 등을 정리하며 저술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손 고문의 한 측근은 “정계은퇴 선언을 한 뒤 평소 지내고 싶어했던 강진으로 내려오신 것”이라며 “특히 목민관의 중요성과 청렴의 생활신조, 백성 부위의 봉사정신을 강조해온 다산정약용 선생의 가르침과 기(氣)를 받고자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 고문께서 앞으로 여성을 강진에서 보내고 싶다고 해 다산초당 인근 마을을 돌며 현재 집을 구하려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주변 측근들도 손 고문이 전남 강진에 와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당내 손 고문 계로 분류되고 있는 이낙연 전남지사만이 손 고문을 한 차례 찾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손 고문은 지난달 31일 정계은퇴 선언을 통해 “정치가 아니라라도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많은 방법이 있다.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어딘가에 나를 묶지 않겠다. 여행하거나 책을 읽고, 잘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정치적 활동이나 언급을 피하고 강진에서 저술활동 등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고문은 지난 2008년 민주당 대표 임기를 마친 뒤 강원도 춘천 대룡산 자락의 한 농가에서 2년 동안 침거생활을 하다 정계에 복귀했었다.

이에 대해 손 고문의 측근은 “이번에는 지난 2008년 ‘춘천 침거’와 다르다”면서 “향후 많은 국민들이 손 고문을 원하고 찾는다면 고를 배를 문제지만, 본인이 직접 정계복귀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야권의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전남 강진에 등지를 튼 손 고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손 고문은 최근 ‘국민이 뽑는 드림내각’에서 총리 1순위로 추천됐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경제라인’ 모두 TK...너무한거 아니냐

野, 군복무중 석사과정 이수 특혜 의혹 따져

기재위,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는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철학을 집중 검증했다. 여당은 세수 확보에 대한 방안을 집중 질의한 반면 야당은 4대 사정기관(감사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의 영남권 인사 편중을 주로 지적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세입예산 9조원이 평균났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부진하다”며 “세수 확보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고 세수 확보 방안을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세청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며 국세청의 권력기관화 문제를 거론했다.

반면 홍준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부터 경제라인은 몽땅 대구 출신이고, 4대 사정기관장도 모조리 영남이다. 이런 상황에서 표적 수사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임 후보자가 공군 장교 복무 기간 서울대 행정대 석사과정을 이수했다”면서 “군 복무 중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임 후보자의 조사국장 시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라인 직원들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을 지적하며 “직속상관으로서 책임

을 졌다. 후보자가 청장 취임 후 이런 관행들을 잘 척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00년 이후 국세청 고위 공무원단 승진 인원 120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영남”이라며 “청장이 되면 지역균형인사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올해 세수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성실신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이어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옹호하는 세무조사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면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인사 편중 지적에 대해 임 후보자는 “TK에 편중된 했지만 행사 35회부터 38회까지는 (오리래) 호남출신 비중이 높다”고 반박하면서도 “다만 국세청은 전국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청장 같은 기관장은 반드시 지역을 고려해 인사하겠다”고 밝혔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발암물질·중금속 섞여 유통’

새누리 주영순 의원 지적

방향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방충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8일 방충제, 김서림 방지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등 6종 74개의 제품 가운데 45.9%에 해당하는 34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함유물질, 바롬과 크롬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안전기준조차 없어 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18개 제품 중 12개의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나왔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하반기 모집 공고



‘희망두레’는 상부상조의 한국고유 전통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으로 공동의 사업을 통해 밝은 내일을 함께 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동의 사업추진을 실행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 및 등기를 완료한 협동조합

※ 소상공인이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

대표전화 **1588-53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신청요건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 협동조합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지원내용

•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홍보), 공동직업장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정비구매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13년 기 지원 협동조합은 지원한도(1억원)를 초과하지 않은 잔여금액 한도 내 추가지원 (기 지원분야 중복지원 불가)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1억원 한도(공동정비에 한하여 최대 2억원까지 지원가능)
•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20~30% 자부담금(현금납입 원칙)
• 사업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 가능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한도 (천원)	자부담 비율
공동 직업장 차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임차비용	10,000	20%
공동 정비구매	공동사용 정비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200,000	30%
공동 기술개발	판매기법 등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30,000	20%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개발 비용	20,000	20%
공동 마케팅	판로확대를 위한 광고,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50,000	20%
공동 네트워크	홈페이지, 소팅물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20,000	20%

지원절차



• 현장평가 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협동조합, 1년차와 2년차 협동조합을 구분하여 평가
• 소상공인의 업종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예정

신청방법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원센터 1588-5302

주의사항

•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사업 신청, 사업기간 등 자세한 상담 문의는 위 문의처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및 신청양식 등 세부사업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http://www.semash.or.kr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 http://coop.semash.or.kr